제5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토 론 2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 학 실 전임연구원
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

김학실(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전임연구원)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 대안경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 중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졌던 자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는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고찰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까지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서는 자활사업 보다는 전달체계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자활사업이 사회적 경제로 조직화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지역자활센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 이상 활동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빈곤층을 위한 복지와 연동되는 근로사업이라는 점에서 궁극적 목표는 노동할 수 있는 빈곤층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활사업은 자본주의 운영원리와는 다른 특징과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연구자체의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사회가 대안경제로써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지역에서 자원동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이윤인 반면 사회적 경제는 타인 또는 공동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즉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배제하지 않지만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목적 즉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분류되어지는 사회적기업의 목적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 인건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 생존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동원이 다양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자원동원은 더 열악하다는 점에 비추어불 때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목적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지역적 차원에서 자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지역성이 가져올 지역격차는 없는 것인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적 영역 즉 지리적, 물리적 한계를 규정하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환경보호, 지역 내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할 때 지역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99%를 위한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5개를

선정해 기초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모델 개발과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나선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2012.6.11 뉴스와이어 보도). 다른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형 사회적기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원액이 다르다는 점도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자치단체의 재원과 자립도에 의존함으로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복지 영역을 지역에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자치단체의 재정 역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기반으로 하는 그 지역성이 오히려 격차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사회적 경제와 정부(지자체 포함)와의 거리는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활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으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역 내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의 지원 후에 일몰형식의 중단이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부 의존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가?

넷째, 지역적 차원에서 인프라 조성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원이 부족할수록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의식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